

“北, 풍계리 핵실험장 외부참관단 방문 준비”

국회 정보위 국정원 국정감사...김민기 민주당 의원 브리핑 “영변 원자로 등 핵·미사일 시설 주시...국정원, 탈정치 노력”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 31일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 외부 참관단 방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북미 간 합의된 사항이다.

국정원은 이날 내국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 중으로,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일부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준비 및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의 행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변 5MW 원자로를 비롯한 핵·미사일 시설을 면밀히 주시 중이며, 현

재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첨단기술 해외 유출사건 총 40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중국으로의 유출이 28건으로 70%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국정원이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40건의 첨단기술 해외 유출사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에는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술도 7건 포함돼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최근 해킹 조사가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를 해킹한 뒤 이 업체의 고객들에 침투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시도가 빈발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북한 역시 정보를 빼돌리거나 금전탈취를 목적으로 해킹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현안 이슈를 소재로 한 해킹 메일을 관계자들에게 유포하거나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국내의 컴퓨터를 해킹해 가상통화 채굴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그간 정치·사회 이슈에 끊임없이 연루됐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조사와 기능을 폐지하고 준비 예산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탈정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문대통령 오늘 국회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 지수 하락과 각종 기관의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데 따른 민생 경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만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경제 등 경제활동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큰 틀에서 확장적 재정에서 담긴 정부의 의지 등을 국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재차 진전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초당적인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공소시효 특별법에 반인륜범죄 포함돼야”

평화당 최경환 의원 발의 ‘5·18 진상규명입법’ 주목

정부 공동조사단이 지난 31일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17건의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 발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북구 을)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 입법이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발의해 민주당 이기호,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의 추가적인 특별법 발의를 이끈데 이어 병합심리된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5월에는 특별법 내의 조사 대상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반대 이어 6월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직원수를 50명 내에서 100명 내로 증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조건 완화,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달아 냈다. 현재 이 두건의 개정안은 국방위에 계류돼 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공동조사단도 이날 정책 제언을 통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상의 조사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조사위원회에 성폭력을 전담하는 소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만나 “5·18 진상규명 위원회가 출범한다 해도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위가 동행명령제와 고발 및 수사 요청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특히, 공소시효가 지나서 가해자를 찾는다 해도 형사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소시효 특별법에 반인륜 범죄를 포함시키거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를 적극적으로 해석, 성폭행을 내란 실행 행위나 과정으로 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선거제도 바꿔 정치 바꾸자” 지난 3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 바꿔 정치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내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함께했다. /연합뉴스

한국당 빠진 여야 “5·18 계엄군 성폭행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른미래 “비극 재발 막아야”... 평화당 “한국당 반성하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31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광주일보 보도(지난 30, 31일자 1, 3면) 및 정부 발표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5·18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비판하며 진상조사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

으로서 하루빨리 진상을 밝혀내고 치유를 도와드려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및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너무 늦었지만 국가의 폭력을 국가가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 두 번 다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5·18 피해 여성들의 아픔이 기억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역사와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차일피일 위원회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집단성폭행과 성고문까지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경현 대변인은 “그동안 구전으로 떠돌던 5·18 당시 성폭행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사건의 가해자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공동조사단의 한계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마냥 늦추고 있는 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지원원 등 조사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추천하는 희대의 코미디는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계엄군과 수사관에 의한 민간인 여성 성폭력은 국가 폭력이라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국가의 어떤 보상으로도 치유가 쉽지 않겠지만 진상규명과 치유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당의 위헌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당에 해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시·도지사 15명 “판문점선언 비준하라”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동참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14명과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31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등 3명의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외에도 11명의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원희룡 지사는 기자회견에는 참

석하지 않았지만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단체장들은 성명에서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준동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에 이같이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

광주광역시 인구조번복지협회 | 광주전남지회

‘드든’육아 성공비법

함께 하면 드든 육아 성공비법

직장난치문화 제로법
직장일 출퇴근은 언제까지, 휴는 대신 배려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수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이해에서 방해하는 애매하기!

육아후수 주의법
서로 육아에 혼수 대신 힐링자 따뜻한 한마디 건네기!

직장 가족 이웃

육아대디 지지법
이해할 수 있는, 칭찬, 격려, 응원하기!

드든육아 동참법
함께 육아, 아이 안전, 건강,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한마음 공인중개사

- 광산구 송정동 아파트상가2층 34평형(학원직합) 매매가 7천만원
- 동구 계림동 빌라 35평형 5층중4층 현미대중 전세8000만원 포함 19년1월만료 매매가1억3천만원
- 남구 백운동 2층상가주택 99㎡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매매가 1억8천만원
- 북구 북동 4층상가주택 대지 98㎡ 보증금1300만 월85만원 안집제외 매매가 3억7천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상가주택 230㎡ 보증금 1억2천만원 월85만원 매매가 4억5천만원
- 동구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 132㎡ 보증금3300만 월155만원 안집제외 매매가 5억5천만원
- 동구 두암동 3층상가건물 240㎡ 보증금 3천만원 월220만원 매매가 6억원
- 북구 신안동 5층상가건물 146㎡ 보증금 5천만원 월282만원 매매가 7억원
- 북구 운암동 4층상가주택 145㎡ 보7천만원 월260만원 매매가 8억원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270㎡ 보증금 5천만원 월310만원 매매가 8억5천만원
- 남구 백운동 3층상가주택 210㎡ 보증금 1억원 월500만원 매매가 14억원
- 북구 신안동 대지 520㎡ 매매가 14억5천만원
- 남구 주월동 5층상가주택 대지500㎡ 보증금2억 월920만원 안집제외 매매가28억원
- 북구 운암동 대지2600㎡ 보9천만원 월500만원 매매가 44억원
- 해남 사철맞남골목 1300기 토지3만6천㎡ 매매가 10억원
- 화순 도곡온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4층 3동 객실37개 월매출 6천~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포함 매매가35억원

☎ 010-2314-8567 (계림오거리)

펜션·가든 부지 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개강 (초급 및 중급)

- 일시: 2018. 10. 30(화) 오후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구 우측2층)
- 수강료: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시: 2018. 10. 23(화) 오후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 및 수목장 수백과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